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국방부가 2026년 7월 29일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의 근거가 될 법률입니다.

01

핵 비확산 원칙 법률 명시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사용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02

국무총리 소속 전략위원회 설치

사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03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율

자격증명·교육훈련·보고·검사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2027년까지 제도 기반 완비 목표

- 2025.11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및 핵 연료 조달 협의 합의
- 2026.02.10 외교부, 협정 교섭 전담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 설치 훈령 시행
- 2026.05.26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및 장보고 N 사업 공식화
- 2026.06.10 국방부, 범정부협의체(TF) 제2차 전체회의, 특별법 입법 방향 논의
- 2026.07.29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개편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7.29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9월 7일까지 의견수렴)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입법예고 의견수렴 마감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무엇을 담고, 누가 적용받나

법안 내용

CONTENTS

핵 비확산 원칙과 전략위원회 설치, 획득 특례와 시설 설치지역 지정,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인력 양성과 산업기반 조성을 종합 규율합니다.

적용 대상

SCOPE

건조에 참여하는 방산·조선 기업과 원자력 연구·인력 양성기관이 대상입니다.
자격증명과 교육·훈련, 보고·검사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가 규정됩니다.

2030년대

1번함 진수 목표(장보고 N 사업)
2027년까지 제도·정책 기반 완비 예정

법정부 추진 체계

국방부·방위사업청
사업 주관 및
획득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규제
및 기술 지원

외교부
핵연료 협정 교섭
IAEA 대응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 01
 - 제정안의 원자력 안전관리 요건 사전 파악
 - 자격증명과 교육훈련 및 검사 기준 점검
- 02
 - 산업기반 조성·전문인력 양성 정부 지원 계획 구체화 동향
 - 사업 참여 준비 체계 사전 정비
- 03
 - 한미 협정 교섭과 IAEA 협의 진행 상황 주시
 - 협의 결과가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사전 검토

남은 쟁점

핵무기 개발·제조 금지를 법률에 명시한 데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핵연료 조달을 위한 한미 협정 체결과 IAEA 협의는 남은 과제입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